음악교육, 수요와 공급의 소통이 가능하게

주 대 창 ·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사

음악교육 현재 상황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면 예술과 관련하여 문화를 가꾸는 모든 사람을 일컬을 것이다. 이것을 음악 분야에 적용시켜 보면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예술인과 예술가의 의미가 다르게 여겨지듯이 음악인과 음악가의 언어적 이미지가 같지 않다.

이를테면 음악가라고 범위를 좁혔을 때, 이들은 음악기능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경우로 이해된다. 이에 비하여 음악인은 음악연구, 음악평론, 음악교육, 음악경영 등 음악기능 외에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따라서 음악가뿐만 아니라 음악인까지를 포괄하여 문화예술인 양성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음악인 양성의 최종 과정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배운 사람들이 '주요' 음악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한국의 음악대학을 마친 후 외국에서 음악공부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음악인들이 다루는 음악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서양의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에 기인한다. 하지만 그러한 태생적 요인 외에도 외국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것을 일종의 질적 '인증'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한국의 음악인 양성이 그 완성도에서 상대적으로 뒤져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 대목이다.

국내의 음악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연주가 및 작곡가를 양성하려고 한다. 음악대학에 학문적 과목들이 있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배우는 음악학 전공 과정은 드문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음악기능의 전수에 치우친 음악가 양성 체제는 그 외의 음악인 교육을 부실하게 만든다. 음악문화의 저변 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음악인은 학교 음악 교과교사와 사회에서 일반 학생들의 음

악 레슨을 담당하는 음악 실기교사들이다. 학교 음악교사의 양성은 사범대학에서 음악교육 전공이라는 독립적 과정을 거치거나, 음악대학에서 교직과정을 함께 이수하거나, 음악대학을 마치고 교육대학원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범대학의 음악교육과나 음악대학의 교직 이수 및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 전공 과정 모두, 그 본래적 취지에 맞게 구별된 교수활동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아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일반 음악대학의 교육과정과 실제에서 대부분 크게 차이가 없으며, 음악대학의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 전공은 주로 음악대학의 작곡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초등교사의 경우 음악교과 전담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 능력의 향상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음악실기 교사 체제는 아직 국가적 기준이 모호하다. 음악대학을 나오면 음악 레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자격 기준이나 자격증 부여 또는 사후 관리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음악학원을 열거나 개인 음악 레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신분 및 보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레슨비는 일종의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음악 레슨의 질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그 수용과 공급이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 사교육 시장을 방치하는 것은 음악인 양성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문제점은

제도적 고등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비제도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은 음악인 양성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인레슨에 관여할 소지를 만든다. 입시과정에 전문 음악인들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개방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이 효율적 음악인 양성의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원하는 사람 누구나 동등한 개인레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입시를 위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둘째, 음악적 기능의 향상 못지않게 특정 대학의 입시 경향에 대한 지나친 추종이 음악교육의 중심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성공적 음악인으로 진입하기 위한 길이 고비용 개인레슨이라는 통로로 굳어져 사회의 저변 확대에 기초한 음악인 양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문 음악인 양성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중·고등학교의 과정은 학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위에서 언급한 개인 레슨을 배제할 수 없는 체제이다. 단순히 학교의 교과 및 공식적 레슨만을 이수하여서는 상급의 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음악대학 입시를 위한 일직선의 길만 달려야 하기 때문에 전공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전통적으로 음악인들은 음악을 만들고 또 연주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음악문화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빨리 변하는 오늘날, 주체적 음악문화의 향유를 위해 여러 가지 악기와 작곡 또는 음악학 및 음악교육 분야가 고루 발달해야 함은 물론, 일부 전문 연주가를 제외하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음악 관련 능력을 겸할 수 있어야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음악인 양성이 좁은 의미의 '예술가'라는 하나의 길만 터놓고 있는 것은 장차 전공에 따른 음악인들의 질적 불균형을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의 포괄적 음악수용을 저해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음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꼭 전공 과정의 단순함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진로 가능성이 폐쇄된 채 획일화한 교육방식이 전반적 음악문화의 역량을 떨어뜨릴 것이라

는 이야기이다.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의 경우, 전문 분야로 나뉘기 전의 공통부분 교육도 강도 있게 시키고 있다. 민사소송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이라고 하여 법철학이나 법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성형외과에 근무할 사람이라고 하여 내과 관련 지식이 필요 없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피아노 전공이므로 피아노만 잘 치면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가 어떠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단면은 학부의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음악대학의 전임교수 구성과 석 · 박사 학위과정의 운영에서도 상당부분 드러난다.

외국 고등 음악기관에서 공부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교육이 한국의 것보다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꼭 외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교육을 한국에서도 여건만 갖추어지면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학생에게 더 적절한 교육을 시킬 당위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질적 수준 및 제도적 여건의 향상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난다.

음악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을 사랑하는 문화가 사회 저변에 퍼져있는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음악인으로의 길을 가는 데 한국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학생의 관심과 능력이 증명되면 기본적으로 우수한 음악기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우선 원하는 어린이들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음악을 배울 수 있다. 한국의 음악학원에 해당하는 음악학교(Musikschule)는 일정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 자치 단체마다 최소한의 수가 개설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방정부)는 음악학교의 요건 및 교사의 질과 수급관계뿐만 아니라 레슨비까지 체계화하여 안내한다.

그리고 음악공부 시키는 것이 가계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녀수가 늘어감에 따라 국가가 음악교육비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또 곳곳에 있는 개인 레슨 교사들이 음악학교 체제의 교육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을 보충하고 있다. 음악학교 및 개인 레슨비의 수준은 서민층이라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전문 음악인으로 들어서기 위한 레슨비 역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음악인으로 진입하기 전의 어린이 단계에서부터 성인 음악인의 교육에 걸쳐 최소한의 질적 및 양적 기회균등의 보장은, 음악기능을 가르치는 음악교육에서 음악적인 사항을 전달하려는 '음악으로의 교육'(Erziehung zur Musik) 뿐만 아니라, 인성함양을 의도하는 '음악을 통한 교육'(Erziehung durch Musik)까지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음악학교에서든 또는 개인레슨에서든, 그리고 나아가 성인 음악 레슨에서든 음악기능의 지도를 단순히 외형적 능력만을 키우는 작업으로 보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더 많은 음악인을 양성시킨다.

음악이 공산품과 같은 단순한 소비물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정신적 종합물로 남아 있게 하려면 그 수요와 공급에서 최소한의 소통 가능한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일반 학교의 음악교과 교육이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 유지를 위한 음악의 수용에 초점이 있다면, 음악학원(학교)이나 개인교사의 음악레슨은 그러한 문화 인력을 양성해 내려는 것이다.

전인교육 또는 사회화 등 음악외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일반 학교의 음악교과 교육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지역의 음악학교 및 이의 분교들과 자연스럽게 협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정부의 교육·문화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는 등 제도적으로 그 효율성을 관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지만, 대부분의 독일 음악인들은 음악작품의 저작료나 연주비로 생활하지 않는다. 그들의 대부분은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음악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음악문화를 육성하고 보다 나은 음악인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된다. 독일의 음악대학 또는 음악원의 전공과정을 보면 이러한 현실에 걸맞게 그 전공 과정이 매우 다양하다.

한국의 음악대학에서 흔치 않은 음악학 전공, 음악교육 전공, 음악양육 전공, 기악교육 전공 등이 눈에 띈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하여 더욱 대비를 이루는 것은 바이올린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다른 여러 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연주가를 지향하는 솔리스트반, 직업적 전문 연주가를 꿈꾸는 연주가반, 학교에서 음악실기를 담당할 실기교사반 등이 개설되어 있다.

기악교육 전공의 경우에도 주전공으로 합창과 기악합주 지도(Chor-und Ensembleleitung)를 겸하는 과정, 기초 음악양육(Elementare Musikerziehung)을 겸하는 과정, 재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정 등이 나뉘어 있다. 이러한 전공과정 학생들은 필요에 의해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진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중복되는 과목들은 서로 인정해 주며, 실기능력은 담당교수가 직접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최정상의 연주가 과정을 밟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긍심이나 학습의욕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우수한 대학수학능력시험(Abitur)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등학생들이 적지 않은 독일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적성에 맞는 진로의 선택이 곧 성취능력의 고저 또는 삶의 우열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음악대학 교육기간 동안에 전공과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전반적 대학교육 방식이 강의를 통한 시간 수 채우기에 의하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소위 학점이라고 하여 그 과목을 들었느냐에 졸업 기준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 그런 외형적 틀을 유지하더라도 최종적 능력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이수학점 수가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적지만 공부내용은 더 많게 된다. 독일에서 음악 실기교사나 음악 교과교사의 과정을 밟게 되면 전공실기 외에 부실기와 전공 연합 활동(즉흥연주 등), 음악학 관련 과목, 그리고 현장학습 및 수업(레슨)실습 등이 있게 된다. 한국처럼 전공과정이 연주가 양성 쪽으로 거의 획일화되어 있고, 전공실기 레슨에 학점 수를 대폭 할애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내용을 배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질의 음악인 교육 담당자의 양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임금유지 정책인 것으로 여겨진다.

음악이 공산품과 같은 단순한 소비물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정신적 종합물로 남아 있게 하려면 그 수요와 공급에서 최소한의 소통 가능한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일반학교의 음악교과 교육이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 유지를 위한 음악의 수용에 초점이 있다면, 음악학원(학교)이나 개인교사의 음악레슨은 그러한 문화 인력을 양성해 내려는 것이다.

학교의 음악 교과교사처럼 음악기능 지도를 담당하는 실기교사에게도 최소한의 직업적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바로 그 인력양성 단계에서부터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